

중복 결제 잘못하고도 배짱 부리는 업소들

광주 식당 등 기기조작 미숙·주말 핑계 환불 제때 안해 물의 번거로운 결제 취소 고객에 떠넘기기 등 암채 상흔에 '분통'

#1. 지난 9일 주말을 맞아 광주시 서구 치평동 Y한정식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점심을 먹은 A씨는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결제 승인 후 뒤늦게 일행 중 다른 사람이 먼저 음식값을 계산한 사실을 알게 됐고,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의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사과는 커녕 종업원의 기기 조작 미숙을 핑계로 내세웠고 주말 등을 이유로 환불도 거절했다. 한술 더떠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요청하거나 월요일에 해당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면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식당 업주는 "한달 전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바꾼 탓에 조작이 미숙해 발생한 일로 기존에도 종종 있었다"면서 "오히려 돈을 더 적게 결제 받은 적도 있었다. 이번은 주말이라 조치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2. 지난 10일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에서 내린 B씨는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최근 교체한 신형 카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택시기사는 이후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았으며 두세 차례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고, B씨는 두 차례 승인(요금지불)이 됐다는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중복 결제가 됐다고 알렸지만, 택시기사는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해 돈을 받으라며 짜증을 냈다. B씨는 결국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결제를 취소하고 해당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광주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B씨는 "만약 신용카드 결제 알림 메시지가 없었으면

소액인 탓에 중복 결제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고객의 신용카드를 중복 결제했다가, 이를 발견한 당사자가 항의하면 번거로운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손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체 수입으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중복결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확충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복 결제 문제로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건, 2016년 19건, 2017년 25건, 2018년 5월 31일까지 7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민원 대부분은 업주들이 결제취소를 미루거나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경우 어렵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부 업주들은 미리 요금을 받은 뒤 같은 식사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결제하면 이를 알려주지 않고, 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다수가 일정시간 음식 먹는 식당 등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 동구의 한 유명 식당에서 중복 결제피해를 겪었다는 한 고훈민(54)씨

는 "1인당 3만원짜리 코스음식을 예약하고, 다른 일행이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1인당 5만원씩을 결제했다"면서 "뒤늦게 항의하자 종업원이 실수한 듯 하다. 다음에 오면 잘해주겠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아 황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의 중복결제 피해를 접수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나 사업주 이해관계나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우선하는 분쟁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데다 사업주가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실제 해당 업소 등이 직접 환불 조치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카드회사에 연락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한 뒤 재방문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 분쟁 민원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박태학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장은 "결제 취소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업주가 끝까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도적 맹점이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연구용역 업체서 돈 받은 교수 징계 부당" 광주지법 "뇌물 아닌 자문료"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돈이 뇌물이 아닌 정당한 자문료라고 봤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형국 부장판사)는 "국립대 이모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감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금 3600만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0~2012년 용역·연구 과제 책임자로 있으면서 한 업체를 참여시키고 이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받았다. 대학 측은 지난해 4월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료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며 이 교수를 징계했다. 이 교수는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 관료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금품이 정당한 게 제공됐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다"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금품을 모두 주거 래계좌로 받았고, 과세관청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점,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원고와 업체가 자문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자문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진료 불만에 방화 위협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광주교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고, 이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포함해 26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가 배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는 항의했다. 이어 "퇴원하라"는 말을 듣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L를 사와 병원 바닥에 뿌리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고 30분간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12개월은 훈시에 불과"

법원 "소멸시효 3년 타당"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춰,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보다 짧게 신청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A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10월에야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강효인 판사)은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법원노동청장을



6·15 18주년 기념 통일쌀 모내기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이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광주 서구 서창동 통일쌀 경작지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이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광주 서구 서창동 통일쌀 경작지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이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광주 서구 서창동 통일쌀 경작지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학생 너울성 파도 휩쓸려 실종

지난 16일 오후 4시 56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익금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A(16)군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간구조선 32척, 헬기, 구조대 등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A군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A군은 형 B(18)군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함께 바다에 빠진 B군은 인근에 있던 안전관 리요원이 구명부환을 긴급 투하해 무사히 구조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A군은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아직 개장 전인 익금해수욕장을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바람이 많이 불고 너울을 동반한 1.5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바람에 A군이 휩쓸린 것 같다"면서 "A군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민

지역환경단체, 광양 백운산 반달곰 폐사방지 대책 촉구

지역 환경단체들이 광양시 백운산에서 울무에 걸려 반달가슴곰(5년생 수컷, 개체번호 KM-55)이 폐사한 사건(광주일보 15일자 10면)과 관련, 광양시·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에 폐사한 KM-55는 지난해 7월 지리산에서 삼진강을 건너 광양 백운산으로 이동하며 넓은 활동 범위를 보였다"며 "울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2004년부터 반달가슴곰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며 "반달곰이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이동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에 폐사한 KM-55는 지난해 7월 지리산에서 삼진강을 건너 광양 백운산으로 이동하며 넓은 활동 범위를 보였다"며 "울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 이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광양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음주 뺑소니 차량 추격 검거 도운 택시기사에 감사장

○...경찰이 음주 뺑소니 차량을 800m 추격해 검거를 도운 40대 택시기사에 감사장을 수여.

이를 친 뒤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800m를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2%)사실까지 밝혀졌는데, 택시기사 정씨는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다른 택시기사들도 다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정모(49)씨는 지난 7월 밤 1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예술고사거리에서 김모(29)씨의 BMW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며 박모(22)씨의 배달 오토바

를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2%)사실까지 밝혀졌는데, 택시기사 정씨는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다른 택시기사들도 다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요구조건: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2384	1	고흥군 도양읍 용천리 520-1 264㎡ 고흥군 도양읍 안평1길 30-20 33.3㎡ [현황 55.1㎡] 제세외 차양 등 14.2㎡	대	14,023,900	일괄매각, 제세외 건물포함
2017타경 12728	1	광양시 광양읍 세동리 신34-8 742㎡	임야	123,172,000	일부방나무소재
2017타경 12902	1	고흥군 고흥읍 동림리 신9 29355㎡ 동소 산12 18942㎡ 동소 산14 29950㎡ 동소 산16 25785㎡	임야	85,811,040	일괄매각
2018타경 388	1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911-2 22㎡	전	10,017,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신12-1 9380㎡ 보성군 보성읍 쾌성리 신94-1 51372㎡ 여수시 오원동 94-2 19㎡	임야	94,967,200	일괄매각
2018타경 388	1	동소 산79-1 10476㎡ 동소 산79-4 3868㎡	임야	84,827,900	일괄매각, 분묘소재, 수목포함
	2	동소 150-1 178㎡ 동소 153-1 344㎡	전	19,17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원상복구명령발하여 불가능성있음
	3	동소 334-3 942㎡ 동소 334-4 648㎡ 동소 334-6 298㎡	전	115,67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388	4	동소 산92-1 13703㎡	임야	69,885,300	수목포함
2018타경 1237	1	고흥군 동강면 유촌리 178-1 40㎡ 동소 594-1 72㎡ [물건번호1:수목포함]	답	6,70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1299	1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911-2 22㎡ 동소 909-3 16㎡	전	10,017,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1534	1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775 301㎡	답	3,0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양치
2018타경 50727	1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831-5 1117㎡	임야	16,755,000	행차
	2	보성군 조성면 은곡리 829 506㎡ 동소 828 942㎡	전	17,623,3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0789	1	순천시 송광면 활산리 신275 17643㎡	임야	19,407,300	분묘수기소재
2018타경 50161	1	사유본거지:여수시 시청로 241 [여천동] 등록번호:전남02리2618 기종:골목기 연식:2009	중기	115,000,000	보관장소:순천시 충효로250이수지동 차대매상사
2017타경 13141	1	선정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의종류·명칭: 선박 총톤수 선적:예,알,피 총본수:4.99톤 전 수년월일:2006년1월19일 [운항정지상태로 정상가동여부확인요,의정종선박예포함]	선박	44,207,000	보관장소:여수시 국동항 [대선선박]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가격이 초과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여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청이 매수보증금의 미반납으로 실패되는 경우 그 공여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7. 2.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7. 9.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명부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한 기밀입찰방식에 사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명부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0원]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된 자기인수용 또는 현금 증빙하거나 지급보증계약서를 제출한 문서 [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자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식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 및 최고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 상호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거래가격인도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장부에 증액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 확정된 대금지급기한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종상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은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종상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허가, 비행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예하며, 관공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청탁 및 지상권이나 가압권의 말소등기를 작성하는 등 관공로에 지방공채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재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등의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 설정된 납부보증금 먼저 주된등록신청인과 매각과 거주하고 있는 입찰인이나, 사업 자등세입자를 위한 입찰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영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유인방에 게시하여 사정(신청)과에서 전자등록(신청)에 비추어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명부에 나오지 않는 입찰자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필요하지 아니한 신분공고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부를 첨부한 위임장 등 반드시 입찰보증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등 지상권등 설정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거래가격인도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양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⑤ 공고된 물건에 매각하기 전에 매매상환이 되어있거나 집합회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⑥ 신청에 공고되는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수첨사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문의 공고나 법원에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⑦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⑧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명령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명매공고 - 매각결과 공고]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 정보는 법률상 재판공고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상에서 열람 가능한 경우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로는 열람에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호관 윤영수